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계속되는 ‘조국 블랙홀’

조국 후폭풍 속 정기국회 돌입…민주 “민생 챙겨야” 한국, ‘파면’ 관철

오늘 이인영 교섭단체 연설…조국 장관, 대정부질문 참석 두고 입장차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7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난항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겹쳤을 때 맡기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국 파면’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16일 산발식을 감행하기로 하는 등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자는 민주당과 조국 파면을 요구하는 보수야권 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조국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17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된다. 이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오산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진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민생을 챙기기 위해 정쟁을 중단할 것을, 한국당과 바른미래

당은 조 장관 임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대여 비판 공세 수위를 올릴 전망이다.

또 대정부 질문에 조 장관이 참석하느냐 역시 주요 관전 포인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정부 질문 참석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조 장관의 출석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 장관 출석 여부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

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따라 대정부 질문 일정까지 조정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513조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슈퍼 예산안 역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권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경제 대전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 해 보인다.

이밖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또 다른 난관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오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산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인해 정기국회 평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사안을 놓고서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김윤호 기자

‘좁혀지지 않는 사이’…孫 vs 劉·安 합의이혼 가능할까

조국 정국에도 野 연대 이전…당 재정·비례의원 분할 가능

“가능성 있지만 갈등 골 깊어”…“조개는 기준 없어 불가능”

바른미래당의 당내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합의 이혼’ 설도은 연중에 나온다. 봉합이 어려우니 사이좋게 헤어지는 주장을 있지만 당권파와 퇴진파 모두 현실화 가능성에는 물음표를 붙였다.

바른미래당의 당내 갈등은 지난 4·3 보궐선거 이후 시작돼 벌써 5달이 넘어가도록 장기화되고 있다.

페스트트랙 정국·퇴진파·오신환 원내대표 선출·혁신위원회 평행 등의 고민들을 거쳐 갈등은 점점 더 고착화됐고, 당권파와 퇴진파가 서로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없이 했다.

조국 정국을 맞아 당권파와 퇴진파는 한목소리로 대여공세를 펼쳤음에도 이같은 상황은 여전했다. 당권파인 손학규 대표와 퇴진파 주축인 유승민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을 두고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지만, 한국당과의 연대 투쟁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손 대표는 16일 “바른미래당은

다른 당과 연계하지 않겠다. 조 장관 임명 반대가 정치운동으로 퇴색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조 장관 임명 반대를 기회로 보수통합을 와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유 전 대표는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 후 한국당과의 연대투쟁 가능성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이 같고 협력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합의 이혼설이 등장한 이유는 당 재정과 비례대표의원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양측이 분당을 한다고 기정하면 이 두 시안을 서로 나눠야 한다.

바른미래당의 당 재정은 3분기 정당보조금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내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위한 재정 대비를 포기할 수 없어 당권파·퇴진파 모두 텔 당은 배제한 채 갈등만 이어가기 때문이다. 협의 이혼을 통하면 당 재정을 한쪽이 독식하는 것 이 아니라 서로 나눠가질 수 있다.

양쪽 다 교섭단체가 무너지는 리스크를 앓게 되지만, 당권파는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정리도 합의 이혼 주장에 무게를 더한다. 당시 양분되면서 비례대표 의원들 역시 당권파와 퇴진파로 나누어졌다. 비례대표 의원은 텔 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당에서 출당 조치를 취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된다.

당권파 측에서는 합의 이혼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권파와 퇴진파가 서로 마음이 맞으면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양쪽 다 교섭단체가 무너지는 리스크를 앓게 되지만, 당권파는

현재 바깥에 나가있는 대안정치연대와 뜻을 모으면 교섭단체를 복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퇴진파 측에서는 반발이 크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을 이끈 것은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인데 통합에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던 손 대표가 당 재정 일부와 비례대표 의원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퇴진파 내 한 핵심 인사는 “서로 나뉘면 당권파·퇴진파 모두 비교섭 단체가 될 것”이라며 “그 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이낙연 총리와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 배출 대책 논의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최근 오후 ‘여수산단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값 조작 사건(이하 유해물질 불법배출)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주 국회부의장과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 국무총리에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조사결과 공개 및 관련자 엄중처벌,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측정제도 개선, ▲광양만권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조기시행, ▲지역주민·노동자 건강역학조사와 환경위해평가 실시,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등 5가지 개선대책을 제안했다.

주 부의장은 유해물질 불법배출 사건 발생 이후, 여수산단 뿐 아니라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업체 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직접 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한 관리권을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



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배출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 계약을 증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종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은 상태이다.

주승용 부의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건강·위해성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동안 여수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를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낙연 총리의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한 줄의 광고도 감사하게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고립감 긍지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9-단 672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 고정옥 (651001-2581617)
최후주소 : 순천시 역전길 19(조곡동)
등록기준지 : 전남 순천시 역전길 1

위 고정옥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제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9월 17일

공고인 : 선부원
주소 : 평택시 세교6로 45, 216동 1305호(세교동, 힐스테이트평택 2차)
한정승인수리일 : 2019년 8월 29일
공고기간 : 2019. 9. 17 ~ 2019. 11. 17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에는 노사민정 시장조정 제도가 있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신체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전라남도노사갈등조정제 실무위원회

호남신문 광역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입니다.”



한 잔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약속해주세요